

# 여순사건 신고 올해 말까지 연장... 전남도 “환영”

행안부 “특별법 개정안 의결”  
김영록 “용기 내 꼭 신고” 당부  
향후 신고 안내 캠페인 추진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 전남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고 기간 연장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당초 행안부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1년간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

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었던 데다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접수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는 정부의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 결정, 정부 대표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 등 여순사건 해결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해였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향후 TV,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원 집합 행사, 전남도 향우회 및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다시

금 모든 행정력을 가동한다.

이밖에 사실조사 인력 확충,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 지역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을, 전남 외 거주자는 전남도청 여순사건지원단을 각각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 보성강댐, 주암댐에 6월까지 3000만톤 물 공급

국가물관리위, 내일 상생 협약  
전력 생산 감소분 보전 방안 등

광주·전남 가뭄 대응을 위해 주암댐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보성강댐에 대한 발전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오는 6월까지 물 공급을 이어갈 경우 약 11억원의 발전 손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수력발전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댐 연계운영 방안 및 보성강댐 발전손실 보상의 세부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했다. 전날 기준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의 운영방식을 변경, 주암댐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दर량만 지역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주암댐방면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약 2980만톤의 물이 주암댐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암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30일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번 협약에는 보성강댐이 주암댐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생산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보성강댐의 발전량 감소분 만큼의 전력 공급은 저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양강댐에서의 추가 수력발전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3000만톤의 물이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11억원 정도 보상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가뭄 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용수 총량이 부족했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분야 관계기관 간 상생협력과 협치를 통해 가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보성 찾은 김영록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보성군청에서 열린 군민과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함께 농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 음식 다 맛있지만 대표선수가 없다”

월요대화 ‘광주음식콘텐츠’ 모색  
참석자들 대표브랜드 개발 절실  
음식아카이빙·푸드시장 등 제안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은 21번째 ‘월요대화’에서 광주만의 음식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음식·홍보마케팅 전문가, 관광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콘텐츠 개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김홍탁 ㈜파울러스 최고창조책임자, 윤상현 한국외식중양회 광주시지회 부장, 윤혁진 ㈜오로지스튜디오 대표, 송영애 (재)한국전통문화



전당 한식문화진흥팀장, 정나희 (새빛고을) 전통음식아카데미 회장, 최지영 ㈜좋은피알착한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맛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화에 앞서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는 ‘광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 콘텐츠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음식점 현황·음식 체험·음식 이벤트·음식 상품 등 지역 관점에서 본 음식 콘텐츠 종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자들은 △수요자 맞춤형 음식 개발 △‘맛집 거리’ 특화 △인문학 요인을 더한 음식장차 발굴 △트렌드

에 맞는 전통음식 재현 △스토리를 접목한 대표음식 발굴 △음식 아카이빙 △맛 전문가 육성 △맛집·관광 연계 통합 관리 △지역축제 유료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홍탁 ㈜파울러스 최고창조책임자는 “광주하면 맛과 멋의 고장으로 인식돼 있는데, 와서 보니 맛집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보존(아카이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놀랐다”며 “광주의 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팝업 레스토랑을 수도권에서 운영한다면 입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광주로 음식관광을 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인문학 도시구축을 주제로 22번째 월요대화를 열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 광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학생 독서 진흥”

이귀순 의원 “함께하는 문화공간”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독서모

이귀순 광주시의원(광산구4·사진)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시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협력 체계, 책무, 포상 등이 담겼다.

온라인 매체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점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감의 책무조항에 지역서점과의

임 운영,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의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조례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활성화됐지만, 정작 학생 교육기관인 교육청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돼 지역서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 전남도, 도민 맞춤형 ‘복지 바우처사업’ 추진

노인·장애인 등 대상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용가능

전남도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바우처사업 서비스 이용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사업에 따라 140%까지 가능하다.

이용자 모집 기간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도민은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민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0종이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건강 100세 운동 힐링서비스’, ‘도서노인 해피라이프서비스’ 등 10종이다.

장애인에게는 ‘재가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추

진하며,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자살고위험군 예방서비스’ 등 총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제공 기관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이용권인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 월 6만~20만원대의 서비스를 10~30%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5년간 약 10만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6500여 개를 창출했다. **최황지 기자**